피서 절정 40만명 몰린 전남 해수욕장

바가지 상혼·쓰레기 투기 확 줄었다

숙박시설 개선·경운기 활용 수거… 주차난 불편은 여전

피서 절정기이자 8월의 첫 휴일인 1일 전남지역 65곳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은 이날 하루에만 40만명의 피서객들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보였다.

전국 각지의 피서객들이 몰고 온 차량이 한데 엉키면서 해수욕장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와 주택가까지 승용차로 뒤덮여 피서객은 물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휴가철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바가지 상혼과 쓰레기 무단 투기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의 경우 휴가철이면 전남도청 홈페이지와 명소가 있는 시·군의 홈페이지 및 민원실에는 바가지 요금 신고, 쓰레기로 변한 해수욕장을 고발(?)하는 글이나 항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하지만 올 여름 휴가 최대 절정기로 꼽히는 7월 마지막 주말인 31일과 8월 첫째 휴일인 1일, 이틀 동안 평소의 10배가 넘는 총 8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으나 가격 실랑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불미스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의 시·군들이 휴가철을 앞두고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박 또는 펜션단지를 활성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숙박 시설 개선은 물론 바가지 요금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료나 각종 음식의 가격 시비가 크게 줄었다.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쓰레기 분류장에 쓰레기가 일정량 쌓일 경우 수시로 경운기를 이용해 백사장 밖으로 실어나르고 있었다.

신안 우전 해수욕장의 경우도 민박단지 조성에 군비가 지원되면서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요금이 안정, 지금까지 숙박 요금이나 불편 사항과 관련한 항의나 민원 접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상인 불친절이나 과다 요금 등과 관련해 시비가 일곤 했던 신안 우전 해수욕장이나 영광 가마미·보성 율포 해수욕장 등의 피서지에도 별다른 민원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해수욕장마다 한꺼번에 피서객들이 몰려들면서 이들이 몰고온 승용차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서객들은 되돌아가기도 했다.

완도 명사십리의 경우 1일 하루에만 7만명이 찾았고, 해남 송호 해변에도 5000명이 다녀가는 등 혼잡을 이뤘지만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피서 인파로 인해 피서지마다 활기를 띄었다.

1일 오후 1시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민박(50곳)·식당(30곳) 등 상가 주인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 꽃이 피었다. 식당 주인 김모(54)씨는 "개장한 지 60일이 지났지만 주말·휴일마다 비가 와 적자를 봤다"면서 "모처럼 장사할 맛이 난다"고 즐거워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0분 해남군 송호해변. 주차장이 오전부터 북새통을 이뤘으며, 송호 초등학교 운동장은 물론 인근 도로에도 이중삼중으로 주차된 차들로 가득해 피서객은 물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피서객들은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피서객 이근선(33·광주시 남구 송하동)씨는 "가족끼리 놀러왔는데,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고생했다"며 "6만원에 민박집을 구했는데, 5년 전과 달리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곳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박희석기자 dia@

1일 오후 완도군 명사십리 해수욕장, 마을 주민들로 이뤄진 자원봉사자들이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 경운기로 실어 나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젖먹이를 버리다니…" 비정한 모정

광주·장흥·장성서 영아 유기 잇따라

애인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뒤 홀로 아기를 낳은 A(21)씨. 애인과 5개월 전에 헤어져 부모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A씨는 지난달 28일 장흥 자신의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아기를 낳은 뒤 3일간 고민 끝에 자신의 친구 B(여·21)씨에게 "경찰에 '남자 아기가 버려져 있다'고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B씨는 지난달 31일 밤 9시께 A씨로부터 아기를 건네받은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자 아기가 장흥읍 모 예식장 주차장에 버려져 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를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게 한 뒤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주의 한 영아복지시설에 아기를 인계했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을 수상스럽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다.

다음날인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A씨는 "혼자서 아빠가 없는 아기를 낳은 것도 무서웠고, 앞으로 어떻게 길러야 할 지 몰라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2일 오전 6시30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매월동 공구단지 자동차부품상가 2층 출입문 옆에서 생후 1개월 정도로 보이는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낮 12시30분께에도 장성군 북이면 한 주택 보일러실에서 여자아기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취업률 허위·과장 광고 청암대·성화대 시정조치

공정위, 19개대학 적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취업률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순천 청암대와 성화대 등 전국 19개 대학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시안내 책자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등 기만적인 광고를 한 19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성화대· 순천 청암대,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우석대 등 17곳이며, 동국대·경북도립대 등 2곳은 경고를 받았다.

순천 청암대는 졸업생 취업률이 95%이상인 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95%이상 취업률'이라고 광고했으며, 성화대도 '5년 연속 취업률 98%'라고 사실과 다르게 홈페이지 등에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공주대는 전국 200여개 대학 중 장학금 수혜율이 40위인데도 '전국 최상위'라고 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거 특정연도 순위인 것을 밝히지 않고 마치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한 대학도 일부 있었고,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 수준 성적 유지 등 계속 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차장 담벼락서 30대 숨진채 발견

1일 새벽 2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위모(31·남구 진월동)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55)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위씨는 전날 밤부터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씨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중 담벼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장애여성 성폭행 20대 영장

담양경찰은 1일 혼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장모(25)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새벽 3시께 담양군 담양읍 서모(여·45)씨의 집에 복면을 쓰고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서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日, 근로정신대 '99엔 지급' 이의신청 기각

미쓰비시 협의 입장과 배치… 시민모임 강력 반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마저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아이치현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 대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은 연금으로 99엔(한화 13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며,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한 일본 정부가 또다시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2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회보험청의 '기각'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82·광주시 서구) 할머니를 비롯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모임 회원 등이 참석해 사회보험청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또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를 할 예정이며, 이 마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13~15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양 할머니 등 광주·전남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은 지난 1998년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 근무 당시 가입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일본 재판부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고, 도쿄 최고재판소로부터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 연금을 청구한 지 12년 만인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비용 '1인당 99엔' 지급을 통보하자 피해자들과 시민모임은 지난 1월 사회보험청에 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미쓰비시 측은 지난달 시민모임 등과의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채용 알선 대가 1억받은 미화원 실형

청탁·금품 전달자도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1일 환경미화원 채용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반장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직자들이 건넨 돈을 박씨에게 전달한 장모(39·미화원)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채용 청탁 명목으로 장씨에게 돈을 준 류모(41)씨 등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채용이 절박한 구직자들로부터 1억원이나 받은 뒤 이를 모두 혼자 소비한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장씨는 단순한 뇌물전달자였고, 나머지 3명은 박씨 등의 금전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채용 알선을 대가로 류씨에게 40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부터 장씨가 소개한 구직자 3명으로부터 3000만~4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사고 날뻔했다" 보행자 쫓아가 주먹질

쌍나팔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폭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3)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약국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중 무단횡단 하던 홍모(32)씨를 보고 급정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홍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홍씨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해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 흥분.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